

초국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 가지: 동아시아 해역의 새로운 상상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 언론정보학과

I. 들어가는 말

아시아의 부상이 지식인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아시아인지, 누구를 위한 아시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그리는 아시아가 ASEAN 각국이 그리는 아시아와 다르고, 남아시아, 서아시아는 더구나 다른 아시아를 상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상상의 지리를 다양하게 그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체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상상의 아시아(imaginary Asia)에 대한 그림의 다양함은 바람직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패권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의 작동을 제어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특히, 동북아시아 두 개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국가주의(state driven)를 중심으로 상상하는 아시아가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기 전에 다양한 아시아의 지도, 새로운 ‘아시아의 사회(the social formation of Asia)’를 상상하는 작업은 21세기 초 아시아가 부상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 발표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비전 중에 하나인 “동아시아 해역(East Asia Ocean 혹은 Seas), 초국경 네트워크 기반 구축” 작업은 새로운 아시아적 사회를 그리기 위한 조그만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를 동아시아 해역으로 명명하고, 위로 극동러시아부터

중국의 동북3성, 일본 섬과 한반도, 오키나와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까지를 포괄하는 바다로 연결된 대륙과 섬을 설정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해역은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공간이다. 그것은 국가적 영토로 묶인 영토와 바다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과 장소를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역사와 문화, 물질적·경제적 삶을 가리킨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동아시아 대륙의 동쪽은 서태평양(West Pacific)이라는 범주로 흔히 묶여 왔고, 남북미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바다였다. 대서양에 비해 '평온한 바다(Maris Pacific)'였기에 마젤란이 붙였다는 태평양의 명칭 자체가 서구의 해양탐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시대 이후 태평양은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이었지, 아시아 대륙의 동쪽인 적은 없었다.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 대륙의 여러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해양 네트워크는 여전히 미국의 역사적·현실적 존재와 영향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TPP가 그렇고 ASEAN+2 모두 이런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자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태평양이라는 범주를 대신해 아시아 대륙 전체의 동쪽 바다를 동아시아해(East Asian Ocean)로 설정하여, 탈냉전 이후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해라는 명칭이 또 다른 아시아 중심주의를 배태하는 사고방식이라면 경계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동아시아 안에 존재하는 국민국가의 국경적 분할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국경 범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초국경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의 기반으로 식민통치와 냉전 이후(분단된 한반도의 경우 아직도 냉전 후기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 이후 강해지고 있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범주로서 초국경이란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다. 국민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 국가 간 관계만으로는 특정한 국가의 패권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패권적 경쟁 안에서 중소국, 약소국 처지를 고려하면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협력과 공존의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은 이들 중소국, 약소국의 생존을 위한 기반이 된다.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일본의 우경화

와 군비 팽창 등 최근 동북아시아의 갈등은 이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대안적 공동체를 상상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II.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transnational) 범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동아시아에서 초국경에 대한 사고는 일반적인 초국경과 상당히 다른 인식론적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민국가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볼 때 서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근대 국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성립했던 반면, 동아시아 사회는 (특히 중국과 조선, 베트남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되지 않았고, 국가 안에 부르주아 사회가 포함되어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 사회에서 상인 계급이 국가의 자장 바깥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율성을 통해 부르주아 공론장의 단초가 나타났는가 하는 논쟁이 진행되었다(Rowe, 1990; Rankin, 1986; Strand, 1990).

어느 주장이 타당하든 동아시아 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부르주아 집단과 관료/지식인 집단도 국가의 자장 안에서 존재했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의 우산 아래 생활세계가 있었고, 해방 이후 시장과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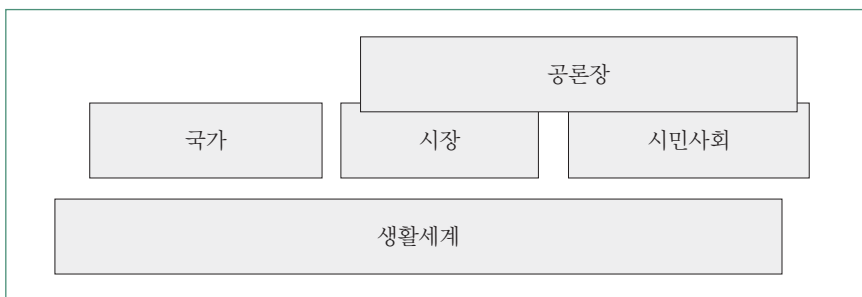


그림 1 유럽 공론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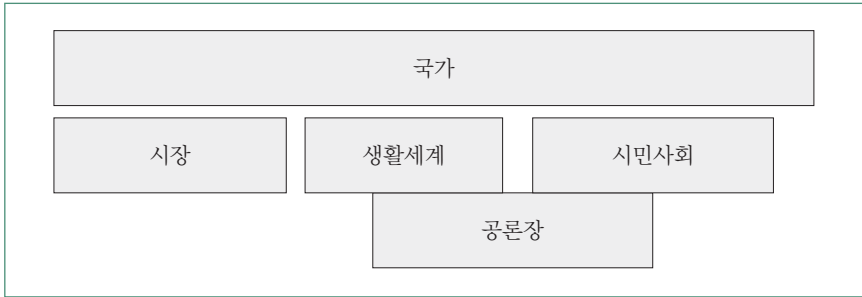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공론장의 구조

사회가 서서히 형성되는 전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3년 한국과 유럽의 공론장의 차이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안에서 대비시킨 바 있다(강명구, 2013).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안에서 공론장은 그림 1의 모습을 띤다.

이 도해가 보여주는 것은 유럽의 경우 국가는 사회 위에서 자라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중국이나 조선 사회와 달리 유럽의 국가들은 사회 위에 존재했다. 일반 대중이나 상인 계급이 군주가 지배하는 국가에 복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중국이나 조선의 경우(일본은 막부가 통일하기 전까지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다), 황제와 왕 아래 거대한 양반 관료의 권력이 시장과 시민을 포괄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최근 19세기 말 상인 계급이 중앙 권력이나 지역 권력의 자장에서 얼마만큼 자율성이 있었느냐에 관해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자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추후에 실증적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필자가 기존 문헌을 검토해 본 지금까지 판단에 따르면), 조선의 경우에도 19세기 말까지 조선 반도에서 활동하던 상인이나 상권이 왕의 통제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해방 이후 한국의 공론장을 훈민공론장이라고 개념화한다는 이론적 시도에서 볼 때,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장은 국가의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영역을 키우고(오랜 민주화 운동은 시민 영역의 성장의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의 우산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시장 역시 국가의 자장 안에서 존재했다(제1공화국에서는 무상원조의 배분권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조국 근대화의 이름 아래 유상원조와 차관, 경제개발 정책, 특혜와 유착을 통해 사실상 시장을 통제했다). 일본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는 일본의 봉건제 논쟁이 보여주었듯 중국, 조선과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우산 아래 시민사회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계몽된 주체로서 시민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 안에서 ‘애국계몽적(patriotic enlightenment)’ 시민이 성장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강명구, 2013).

동아시아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혹은 국가의 자장 안에서 작동하는 시민사회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국경을 상상하는 작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서구에서 ‘초국경(transnational)’ 혹은 ‘국가를 넘어(beyond nation state)’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논할 경우, 동아시아 시민운동의 주체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국민국가에 대해 애국적 태도를 충실히 유지한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일본 국가에,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국의 국가에 애국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보편적 이해를 향한 연대를 논의하게 된다. 애국주의와 시민사회 보편적 연대가 충돌하는 셈이다. 국민화된 시민(nationalized citizen)과 시민화된 시민(citizenized citizen)이 대립한다고도 할 수 있다. 후자는 국민국가의 이해를 넘어서서 때에 따라 자신이 속한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전자는 국민국가의 이해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 점이 동아시아에서 ‘초국경(transnational)’을 상상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II. 사람들의 시야에서 새로운 공간의 설정: 그들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한다

오키나와열도, 센카쿠와 대만섬을 잇는 해양의 열도는 한 세기 전까지 별도의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오히려 내부적 교역과 경제, 문화로 연결된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었다. 몽골과 중국의 동북3성, 극동러시아, 한반도 역시 19세기까지 청과 러시아, 조선에 느슨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다양한 민족(만주족, 조선족, 몽골

족, 다양한 러시아 소수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지역이었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역사를 다른 집단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다른 지역과 지리를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해당 국가의 집권 세력, 기득권 집단은 이러한 국민국가의 이해를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동원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이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영토 갈등, 역사와 기억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일본 대중은 지체하고 있는 일본 경제, 후쿠시마 이후 좌절과 지체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정권의 동원에 부응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대중은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적 동원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¹

동아시아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경적인 새로운 지리를 상상한다는 일은 이런 점에서 국가주의적 동원에 포획되지 않는 동아시아 시민들 간의 새로운 연대를 설정하는 작업이 된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문제 역시 한반도의 지리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을 아우르는 틀에서 바라다본 새로운 시야를 요구한다. 지난 20여 년간 인천과 단동을 오간 단동페리는 물류와 교역의 매개체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북한 화교, 남한의 중소기업과 보따리장수, 북한 상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교류하는 현장이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작은 여객선’이라는 부분에 응축된 한반도와 동북3성의 주민과 삶을 어떻게 바라다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중국 요녕성 선양과 단동 그리고 러시아 극동(Russian Far East) 지방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스크바에 다녀왔다. 중국의 동북3성(North East Three Provinces)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다른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다른 풍경 두 가지는 이렇다.

¹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67%, 중국 응답자의 74%가 일본을 ‘싫어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97%)과 중국(88%)의 응답자 대다수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혐오 감정의 원인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동아일보』, 2014/4/8).

풍경 하나: 북한의 핵 개발 이후 한국과 미국은 5·24 금수 조치를 내려 북한 경제를 압박해 왔다. 개성공단이 폐쇄하면서 중국의 단둥, 북한의 신의주는 북한 교역의 통로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다. 여기에 다섯 개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의 교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평양 의류공장에서 만든 남한의 의류를 주문하고, 단둥에서 ‘made in China’ 레벨을 붙여서 남한으로 수입하던 한국 국적의 수입상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중국인, 북한 출신 화교,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그리고 단둥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큰 이익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남북한 대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려는 한미 동맹의 국제정치적 요구 때문에 일어난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남쪽의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정치적 지지를 받은 반면, 경제적으로는 남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는 양상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홍순직 연구원)은 5·24 금수 조치가 남한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 4,000억 원, 북한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약 4배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노컷뉴스』, 2013/11/2).

단둥 시 신시가지 중심에 한국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창고가 있다. 중국 세관이 직접 이곳에 나와서 들고나는 물건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세를 물리는 일도 하는 장소다. 필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가루,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철강석, 북한에서 만들어진 등산복 20만 장 등이 이동하고 있었다. 창고의 커다란 건물 하나에서는 평양에서 만들어진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를 검수하는(하자를 모니터하고, ‘made in China’ 레벨을 붙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아웃도어 제품은 남한 기업이 중국 조선족 회사를 통해 평양에 주문한 것들이었다.

풍경 둘: 모스크바에서 극동러시아 지역에 관한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이 지역 소규모 상권이 중국 상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러시아 정책담당자들의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중국 동북3성의 인구는 3억 6,000만 명이고,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은 600만 명이다. 푸틴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5년 러시아 극동개발계획은 새롭게 바이칼과 이르쿠츠크 지역을 포함했는데, 여기를 합쳐도 1,100만 명에 불과하다. 아무르 강을 두고 여러 도시를 통해 중국의 소비재가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들어가고, 잘 알려져 있듯 원유와 가스가 중국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 남북한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철도가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그것이고, 이미 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의 수출 수입품이 유럽 쪽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위의 두 가지 풍경은 지난 10여 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의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산업,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국제 정치 역학과 갈등을 넘어서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식민 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중국, 일본, 한국이 영토 갈등을 통해 민족주의적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들 갈등을 넘어서서, 갈등을 비켜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국경(transnational)’은 국가의 주도가 아니라 사람

표 1 한중일, 러시아 간 TSR 이용 컨테이너 화물량

(단위: TEU)

구분	2010	2011	2012*	2012년 전년대비(%)
일본	27,820	37,388	42,301	13.0
•수출	6,133	7,002		
•수입	21,590	30,220		
•transit	97	166		
중국	221,835	339,798	346,238	14.0
•수출	143,703	214,133		
•수입	68,759	110,464		
•transit	9,373	15,201		
한국	88,577	113,485	103,252	31.0
•수출	44,279	48,488		
•수입	25,364	38,686		
•transit	18,934	26,311		

*러시아철도공사, <http://www.rzd-partner.ru/>(검색일: 2013. 1. 30).

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IV. 아시아 연구에서 ‘초국경(transnational)’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비서구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가 구축한 사회제도와 운영방식,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자신의 세계를 이해해 왔다.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어떤 지식이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지식인가 등의 연구문제, 연구방법, 생산된 지식의 평가 기준까지 서구의 이론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비서구 사회에서 지식 생산의 서구 의존은 이제 대다수 지식인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이 서구 이론을 수입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는 지식생산의 식민성 비판은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어떻게 이러한 의존을 넘어설 것인가라는 과제에 여러 가지 해답과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성취와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대답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의 경우, 1950년을 전후해서 인문사회과학 분과 학문의 학회(academic association)가 생겨났다. 2010년을 전후해서 정치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등 대부분의 학회들이 창립 60년을 맞아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는 학술회의와 학회지 특집을 마련했다. 창립 60주년을 맞는 자기 성찰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론과 개념의 서구 의존, 연구문제와 문제의식조차 수입하는 상황을 반성하고 그것을 넘어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구 의존을 넘어선 좋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는 별달리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아 연구(Asian studies) 혹은 아시아에서 지역연구(regional studies)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한국은 물론 중국 대륙, 대만, 일본, 홍콩 대학에서 지역연구는 주류 학문은 아니다. 한국 안에서 한정해서 볼 때 문제 상황은 이렇다. 서구적인 개념으로 볼 때 중국 연구, 일본 연구, 한국 연구는 모두 동아시아학부나 독립된 학과를 통해 가르쳐지고 연구된다. 문학과 역사의 경우 역사

학과 안에서 중국사, 일본사를 교수,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주류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과 일본은 양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지역학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연구 모두 한국학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고 하면 한국문학과 한국사 전공자를 지칭하고 다른 분과학문은 그냥 인문학, 사회과학으로 치부된다. 유수 대학의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자는 대부분 서구(그것도 대부분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이다. 미국 대학에서 이들은 지역연구를 하기보다는 그쪽의 주류 이론과 방법론을 공부하고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지역연구는 어떤가. 미국에서 지역연구(예를 들어 중국학, 일본학, 동남아학)를 전공한 사람과 해당 지역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 중 누가 더 좋은 대학에 자리잡는가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전자라 할 수 있다. 일본학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중국 연구자도 초기에 상당수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동남아시아 연구도 이 부분에선 유사하다.

미국 대학에서 훈련받은 연구자와 중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연구자 중 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은가. 이는 통계를 내보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미국 박사가 확률이 훨씬 높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부분 미국의 중국 연구자는 중국어에 상당히 능통하고 중국 현지 조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훌륭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한국의 대학에 자리 잡은 후 이들 중국 연구자들은 어디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누구와 소통하는가? 이것 역시 미국이나 유럽의 아시아학회와 그곳에서 발행하는 주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출판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은 학자들이다. 중국학자들과 이들은 어떻게 소통하는 것일까.

이들이 중국의 경제학회, 정치학회, 사회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보다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학회에 가는 게 일반적이다. 거기에 가서 영어로 소통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연구자의 평가 기준 역시 미국 대학의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중국학은 미국의 중국학과 다른가? 아시아 내부에 있는 나라인 일본의 중국 연구, 한국의 중국 연구는 어떻게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에 해답을 제시할 능력은 없다.

한국에서 아시아 연구라는 시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살고 경험한 사회를 내부의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내부로부터 만들어진 시각과 이론, 개념에 기초해서 스스로의 사회공동체와 인간의 삶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 이론과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 설명의 틀을 만든 작업을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민대학의 웬치쥔(Wen Tie jun) 교수는 중국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족자본주의 건설이라는 테제로 설명하는 저술(『백년의 급진』)을 출판했다. 설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 사회 내부에서 중국혁명을 해명하려는 전혀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저작과 지적 작업을 아시아 내부 지식인들이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첫 출발점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시아 내부에 인문사회과학의 분과학회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시아 정치학회, 아시아 경제학회 등등. 물론 몇몇 분과학문은 해당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술회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도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교육부,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어느 정도 대학 재정의 최소 수준이 확보된 나라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시아 내부 분과학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한국에서의 인문사회과학은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이해를 통한 보편적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목표로 한다. 대학제도와 지식 생산에서 지난 100년간의 서구 의존으로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이 서구에 의존해 있음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의 정치학, 한국의 사회학은 한국 사회의 범주를 넘어서 아시아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보다 한국, 한반도, 한국인을 아시아적 맥락으로 확대하는 작업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까닭은 단지 이들 두 나라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서가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의 아시아 연구, 일본에서의 아시아 연구는 기존의 지

역연구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기존의 인문사회과학,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학, 한국의 정치학과 사회학이 한국을 어떻게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고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스스로 지역화하는 전략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과학의 지역화(regionalization of Korean social sciences)는 일본, 중국의 사회과학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할 때 한국의 분과학문은 비로소 아시아적 범주를 향해 ‘국경을 넘어(transnational)’섰다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투고일: 2014년 5월 7일 |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13일

참고문헌

- 강명구. 2013. “訓民과 啓蒙: 한국 저널리즘은 왜 애국적인가.”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514-533.
- “떨어지는 이웃… 韓 67% - 中 74% ‘일본 싫다.’” 『동아일보』(2014. 4. 8).
- “정부 5·24 조치… ‘남한 피해액, 북한보다 4배 많아.’” 『노컷뉴스』(2013. 11. 2).
- Rankin, M.B. 1986. *Elite Activism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in China: Zhejiang Province 1865-1911*.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we, W.T. 1990. “The Public Sphere in Modern China.” *Modern China* 16(3), 309-329.
- Strand D. 1990. *“Civil society” and “Public Sphere” in Modern China: A Perspective on Popular Movements in Beijing, 1919-1989*. Durham, N.C.: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Duke University.